



지방직 9급 행정학

1. 총평

수험생 여러분! 오늘 시험치르느라 수고맙습니다.

이번 2018년 지방직 9급 문제는 지난 4월 국가직 9급에 비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85점 이상의 점수를 얻는다면 과목별 합격선 정도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0번(비만의 '적응적 집행'), 18번(부정청탁금지법), 20번(유연근무제) 등의 문제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 18번 문제는 출제상의 오류로 수험생들을 더 당황하게 했을 것 같고, 20번 문제의 경우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라는 행정규칙에 근거한 문제로 내용상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재택근무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유연근무제의 일종임을 유추해서 맞추어야 하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의 문제들을 틀린 경우라면 반성과 공부의 방향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남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맞출 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임을 꼭 명심하시고 항상 기본을 반복해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설 강의를 참고해서 틀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울시까지 꾸준히 달려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 신용한 -

2. 출제영역분석

총론	5	재무행정론	3
정책론	3	정보화사회와 행정	-
조직론	2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4	지방자치론	3

3.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17	기출변형 문제	1	신유형 문제	2
-------	----	---------	---	--------	---

4.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짜맞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1	2	-	10	-	-	7

| 짝짓기 |

0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행정관리론 - 절약과 능률성
-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 【해설】**
- ① [O] 행정관리론은 최소의 비용을 최대의 산출을 추구하는 능률성을 추구한다.
 - ② [X] 신행정론은 형평성을 강조하며, 탈규제는 신공공관리론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 ③ [X] 민주성(사회적 능률성)은 통치기능론에서 추구하는 가치이다.
 - ④ [X] 대응성과 효율성은 신공공관리론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 올바른 지문

-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참여
-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생산성(능률성, 효율성, 효과성)
- ④ 뉴거버넌스론 - 신뢰성(협력)

summary | 행정이념의 시대적 변천

시 기	행정이론	행정이념
19C 초	관료제이론	합법성 : 법률에 의한 행정
19C 말	행정관리론	기계적 능률성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 추구
1930년대	통치기능론	사회적 능률성 : 민주성
1950년대	행정행태론	합리성 : 수단이 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1960년대	발전행정론	효과성 : 목표달성도
1970년대	신행정론	형평성 : 소외 집단에 대한 배려를 강조, 공무원의 책임성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생산성 : 능률성 + 효과성
1990년대	뉴거버넌스	신뢰성 : 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 자본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90



| 말 바꾸기 |

0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적 상황이론 - 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 ② 전략적 선택이론 -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 ③ 자원의존이론 -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 ④ 대리인 이론 - 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 【해설】**
- ④ [X]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한 대리인은 노력의 투입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화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는 등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균형화 방안과 효율적 제약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④ 대리인 이론 - 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정보균형화 방안을 활용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49, 365~368



0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해설】 ① [O]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비시장적 의사결정부분의 연구에 활용한다.
 ② [O] 공공선택론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의 존중을 핵심가치로 한다.
 ③ [O] 공공선택론은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행정의 대응성 향상과 공공재 배분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추구한다.
 ④ [X] 공공선택론은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하여 시장논리에 의한 경제적 동기만을 중시하여, 현실적합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 올바른 지문

-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합성이 낮다고 평가받는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35, 141

▶ ④

0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성과주의예산제도
- ② 계획예산제도
- ③ 영기준예산제도
- ④ 품목별예산제도

【해설】 ③ [O] 영기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에는 영기준예산제도와 계획예산제도 등이 있으나, 계획예산제도는 집권화된 관리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영기준예산제도는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특징으로 하며, 매년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과다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86, 690

▶ ③

| 개념 + 말 바꾸기 |

0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해설】 ② [X]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재정당국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분야별·부처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각 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재원을 배분하는 하향적 예산편성제도이다.

▶ 올바른 지문

- ②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분야별·부처별·부문별)를 제시하면,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재원을 배분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700

▶ ②

| 개념 + 말 바꾸기 |

0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해설】 머스그레이브는 예산의 재정적 기능을 강조하였으며, 정부의 재정기능을 분배기능, 재분배기능, 경제의 안정과 성장촉진기능으로 분류한 바 있다.

- ① [O]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배기능에 해당한다.
- ② [O]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함으로써 형평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만족감을 높이는 재분배기능에 해당한다.
- ③ [O] 경제안정화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경제안정화 기능은 정부의 지출과 조세징수를 통해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등 경기 조절적 기능을 말한다.
- ④ [X] 관료를 통제하는 기능은 쉬크(Schick)가 강조한 행정관리적 원칙이다.

▶ 올바른 지문

- ④ 쉬크는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통제기능).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87

▶ ④

07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제처 - 국무총리
- ② 국가정보원 - 대통령
- ③ 소방청 - 행정안전부장관
- ④ 특허청 - 기획재정부장관

【해설】 ① [O]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정부조직법 제23조 【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O]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이다.

정부조직법 제17조 【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③ [O]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제34조 【행정안전부】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④ [X]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이다.

정부조직법 제37조 【산업통상자원부】 ④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 올바른 지문

- ④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71

▶ ④

08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객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 ② 이익집단정치 -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 ③ 대중정치 - 낙태에 대한 규제
- ④ 기업가정치 -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해설】 ① [O]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는 고객정치적 상황이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에 편익이 좁게 집중되고,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넓게 분산된다.

② [X], ③ [O]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는 낙태규제, 음란물규제와 같이 규제의 비용과 규제의 편익이 넓게 분산되는 대중정치에 해당한다.

④ [O]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는 편익은 국민다수에게 분산되고, 비용은 식품업자에게 좁게 집중되는 기업가적 정치에 해당한다.

▶ 올바른 지문

- ② 대중정치 -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summary | 윌슨(Wilson)의 규제정치모형

▶ 올바른 지문

- ㄴ. 지방공기업평가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되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할 수 있다.
- ㄹ. 환경영향평가 - 1977년 「환경보전법」에 근거가 명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6, 292, 304



| 개념 + 말바꾸기 |

1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실행된다.
-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 ③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① [O] 버먼(Berman)은 미시 집행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 자체가 성공적 집행이며, 정책집행의 성과는 이러한 미시집행과정에서 결정됨을 강조하였다.

② [X]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 세 가지 국면은 미시적 집행구조이다.

동원	집행조직에서 사업을 채택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국면
전달자의 집행	적응(adaptation)국면. 채택된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단계
제도화	채택된 사업은 집행조직 내에 정형화 된 일부분으로 자리잡기 위한 제도화의 과정

③ [X] 거시적 집행구조의 통로는 행정, 채택, 미시적 집행, 기술적 타당성 네 가지로 구성된다. 해당 지문은 채택에 대한 설명이다. 행정은 정책결정을 구체적인 정부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④ [X] 채택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 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지문은 미시적 집행에 대한 설명이다.

▶ 올바른 지문

- ② 미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 ③ 채택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 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 ④ 미시적 집행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276



1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③ [O], ④ [X] 지방자치법 제16조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 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842, 843

▶ ④

1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 ②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 ④ 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 모형의 Model I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해설】 ①, ③ [X], ② [O] 표준운영절차(SOP)는 경험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결정 절차를 마련해 두고 이를 활용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공평성,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용이해지나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
 ④ [X]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앨리슨(Allison) 모형 II (조직과정모형)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다.
-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 ④ 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 모형의 Model II는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258, 260, 261



1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한다.

【해설】 ① [O] 합리적 고위관료들은 책임과 통제가 수반되는 일상적 기능은 준정부조직이나 외부계약(관청형성)으로 떼어내고 가능한 권력중심에 있는 부서에서 참모적 기능을 선호한다.
 ②, ④ [X]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은 니스카넨(Niskanen)의 모형에서 관료들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은 받아들이지만,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결론을 비판하고 합리적 고위관료들은 오히려 관청형성동기를 가지게 됨을 설명한 모형이다.
 ③ [X] 하위 및 중위직 관료들은 주로 핵심예산(직업안정성 개선, 경력축적기회 확대, 승진촉진 등)의 증대로부터 이득을 얻는 반면, 고위직 관료들은 주로(핵심예산을 제외한) 관청예산의 증대로부터 이득(부서의 위신상승, 고객과의 관계개선, 비상사 사용할 여유재원 창출 등)을 얻는다.

▶ 올바른 지문

- ② 합리적 고위직 관료들은 예산극대화를 추구할 동기를 별로 갖지 않는다.
- ③ 고위직 관료들은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을 극대화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39



16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 방식이다.

【해설】 ② [O] 경제 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즉 경쟁범위의 적정화를 위해 생산자(기업)의 본원적 활동(생산·유통·가격책정 등)에 가하는 규제(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규제(독과점 규제)와 경쟁을 제한하려는 규제(진입규제 등)가 있다.
 ③ [X] 포지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보다 더 적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 올바른 지문

- ③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summary | 네거티브 시스템 vs 포지티브 시스템

구 분	네거티브 시스템	포지티브 시스템
개 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음.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가 금지됨.
형 식	원칙 허용, 예외 금지 ~ 할 수 없다. or ~가 아니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 ~할 수 있다. or ~이다.
*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에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줌.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28, 35, 188



17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
- ②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③ 자치경찰공무원
- ④ 지방소방공무원

【해설】 ① [X]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동법 제59조【전문위원】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5】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③, ④ [O]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소방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등이다.

지방자치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65~368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내용	종전(2016. 9. 8.)	개정(2018. 1. 17.)
① 유가증권	5만원	5만원
② 축의금, 조의금	10만원	5만원
③ 음식물	3만원	5만원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5만원	10만원

- 【해설】** ① **[X]** 상품권등의 유가증권은 종전 선물 범위에 포함되어 상한액이 5만원이었으나, 유가증권이 현금과 유사하고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 제외되었다.
- ③ **[X]**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은 종전 ‘3-5-10’에서 ‘3-5-5’(18. 1. 17 시행)로 바뀌었다. 음식물의 경우 상한액 3만원은 유지했고, 선물의 경우 상한액인 5만원은 유지하되 농수산물 가공품, 화훼, 임산물만 10만원으로 올렸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내용		종전(2016. 9. 8.)	개정(2018. 1. 17.)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3만원
	선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를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부강의를 보완 신고 기간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매년	신규채용 시

▶ 올바른 지문

내용	종전(2016. 9. 8.)	개정(2018. 1. 17.)
① 유가증권	5만원	제외
② 축의금, 조의금(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③ 음식물	3만원	3만원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5만원	10만원

19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 ㄴ.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 ㄷ.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해설】**
- ㄱ [X] 역량이란 직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는 고성과자에게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적 특성이다.
 - ㄴ [O] 역량평가제는 다수 평가자의 참여, 합의에 의해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ㄷ [O]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 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 ㄹ [X]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ㄱ. 역량이란 직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는 고성과자에게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적 특성이다.
-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summary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모델

역량구분	사고 역량		업무 역량		관계 역량	
핵심역량	문제 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
평가기법	1:1 역할 수행, 1:2 역할 수행, 서류함 기법, 집단토론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64, 465



20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 ②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 ③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 ④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④ [X]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 지급분은 지급할 수 없으며, 정액 지급분은 지급이 가능하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6.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다. 지급제외 대상자

- 6)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 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정액지급분은 지급가능).

▶ 올바른 지문

- ④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은 지급할 수 없으며, 정액분은 지급가능하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25

▶ ④